

■ 정책 동향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추진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6년 9월 22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의 문제점으로, (i) 투자자 등 신용평가 수요자가 차별화된 평판을 바탕으로 신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시장규율 미흡), (ii) 평가대상기업이 평가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 구조 하에서 신평사가 발행기업의 영향력에 취약한 점, (iii) 그간 신용평가는 공적 규제 영역이라기보다는 시장 자율의 영역으로 보아 상시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하고 실효적인 검사·제재에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신평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 항목 및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항목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신평사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배포·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모기업·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 모기업이나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능력)을 공개하도록 하여, 등급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용평가시장 기반 확대를 통해 신평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제3자 의뢰평가(발행기업의 의뢰 없이도 투자자, 인수인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가 도입되고, 회사채 발행시 발행기업이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제3의 공적 기관(예: 금융감독원)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사례가 없는 펀드 신용평가의 경우 우선 채권형 펀드부터 도입하여, 회사채 이외의 다양한 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 및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실효성 확보방안도 추진됩니다. 등급 장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하거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되고, 현행과 같이 특정 사건 발생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신평사의 취약부분에 대한 테마(예: 이해상충 문제 방지)를 선정하여 수시검사를 하고 필요시 중점감사하는 방식(상시감독체계)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규 신평사 진입 허용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 하에서는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우선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신용평가제도 및 관행을 개선한 후 신용평가시장에서 시장규율이 형성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규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를 거쳐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다운로드 :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